



세종 논평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No. 118  
(2008.10.14)

## 북·미 간의 핵검증 합의와 테러지원국 해제 평가

지난 10월 11일(미국시간) 부시 미 행정부는 북한이 최근 미국의 핵검증 요구를 수용한데 대한 대가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핵프로그램 검증 문제를 둘러싼 대립으로 과국위기까지 치달았던 북핵 문제는 비핵화 2단계인 불능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지 20년 9개월 만에 테러지원국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외교적 숙원을 이루게 되었다.



정성장(남북한관계연구실장)  
sccheong@sejong.org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 10월 1~3일 북한을 방문해 이루어진 북·미 간의 핵검증 합의에는 북한이 과거에 추출했던 플루토늄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과 우라늄 농축, 핵확산 활동 등에 대한 검증이 포함됐으며, 이를 위해 북한이 신고한 모든 시설에 대한 전문가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북한의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하에 접근이 이뤄지도록 했다. 따라서 조만간 열릴 6자회담에서 북·미 간 핵검증 합의가 추진되면, 핵검증 작업은 북한이 신고한 시설로부터 시작해 미신고 시설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신고 시설의 경우에는 미국과 북한이 상호동의를 해야 한다는 전제가 달려있어 실제 검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후속 협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에 대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2일 미국이 2007년의 북핵 관련 10.3합의에서 공약한 대로 북한에 대한 적성국무역법 적용을 종식시킨 데 이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의무를 이행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의 조치에 따라 북한도 “‘행동 대 행동’ 원칙에서 영변 핵시설의 무력화(불능화)를 재개하며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 성원들의 임무 수행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미국과 북한이 이처럼 핵검증과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룸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가 완료되면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위해 추가적으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비록 북한 핵무기의 완전폐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해도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는 국내외의 대북 강경파들이 주장하듯 결코 과소평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는 현실적으로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중유 95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야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전

망된다. 북한은 최근까지 불능화 11개 조치 중 8개를 완료해 앞으로 남은 것은 폐연료봉 인출, 연료봉 구동장치 제거, 미사용 연료봉 처리 등 3가지다. 이 중 폐연료봉은 총 8천개 중 4천700여개를 꺼낸 상태다. 이에 비해 한국과 미국 등이 지원하기로 약속한 중유 95만t 상당의 지원 중 현재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4만6천t에 해당하는 지원이 이뤄졌고, 일본의 참여 여부는 아직도 미지수다. 결국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의 지체가 불능화의 조속한 완료에 제동을 걸고 있는 셈이다.

조만간 6자회담이 열리면 북·미간 합의된 핵검증 의정서가 채택되겠지만, 본격적인 검증활동도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야 하는 등의 필요에 의해 내년이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로 내년 초 미 행정부의 교체로 인한 미국의 상대적인 대북 정책 공백기에도 핵검증은 진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한반도 비핵화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전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방관적 또는 수동적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국제문제인 동시에 우리의 문제인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한 당국간 대화 복원을 위해 한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점진적 해결 방식을 보여 준 것처럼 한국정부도 비핵화의 진전에 발맞춰 남북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병행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북핵 문제는 이제 불능화 종료를 향해 다시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에 미국에서 새 행정부가 출범한 후 북한의 핵폐기 및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경수로 건설 문제를 결합시킨 비핵화 로드맵을 합의하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한국정부가 북핵 폐기 단계 진입 전에는 북한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북한은 적어도 앞으로 수년간 남한당국과의 대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남북대화 단절로 인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전혀 가지지 못하게 되면, 미국은 한국과 북한 비핵화 비용 분담 문제를 제외하고는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결코 한국의 국가이익이나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한 명확한 존중 입장을 표명하며 남북 직접대화를 재개하고, 남북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대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6.15와 10.4선언에는 남북한이 각기 이행하지 않거나 당장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남북한이 선언의 내용을 100% 이행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가 6.15와 10.4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을 선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밝힌 것은 위 선언들에 같이 서명한 김정일 총비서를 무시하고 남측이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깨는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전면경색을 초래한 정치적으로 매우 선부르고 미숙한 행동이었다. 회담을 통해 기존 합의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6.15와 10.4선언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계속 천명함으로써 남측도 합의를 계속 이어나갈 의지가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김정일 총비서의 건강 이상으로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한국정부가 남북대화 복원을 위해 보다 적극

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북한과 미국이 북핵 폐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향해 나아가고, 북한에 공동정권 또는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는 시기에도 한국정부가 계속 한반도 문제의 방관자로 남아있어서는 곤란하다. 김정일 총비서와의 정상회담을 공언해 온 버락 오바마 미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는 한국정부의 입지가 현재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보다 우월한 경제력과 외교력을 가진 한국이 지금이라도 곧바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장관급회담 및 총리회담 개최를 제안해야 할 것이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00 세종연구소  
홈페이지 : <http://www.sejong.org>  
문의 : [commentary@sejong.org](mailto:commentary@sejong.org)

